

무안기업도시 좌초 위기

원인과 전망

# 中자금 막히자 국내서도 투자 꺼려

무안기업도시에 대한 중국 측 투자유치가 기약없이 늦춰지면서 기업도시 개발계획 축소와 함께 전체 사업의 무산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산업교역형 기업도시'로서, 그리고 모든 여건이 열악한 전남의 회생을 촉진할 수 있는 시범사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무안기업도시가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는 이유와 향후 전망을 살펴본다.

◇중국 측 출자 왜 늦어지나=무안기업도시는 한국과 중국이 합작한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과 국내기업들로 구성된 무안기업도시개발(주) 등 2개 SPC(특수목적법인)가 모두 2천940억 원을 출자해 개발할 예정이었다.

이번에 문제된 출자금은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에 속한 중국측 기업이 출자해야 하는 700억 원이다. 중국에서는 외국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할 경우 정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중국 광하기업 등의 무안기업도시 출자신청을 정부에서 승인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중국제산업단지개발(주)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출자기업의 신용보강과 서류보강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8월 말까지 출자금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사업계획 축소·지연되나=규정에 따르면 출자금이 전액 납입되어야 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국 측 출자금이 8월 말까지 확보되지 못할 경우 8월 말까지 개발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한다는 무안군의 계획도 전면 백지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건교부가 '기업도시 단계적 개발'이라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무안기

## 월말까지 개발지구 지정 신청계획 백지화 건교부 제시 단계적 개발도 축소 불가피

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장기 표류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해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중국측과 같이 가는 것이 어렵다면 2개의 SPC가 따로따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이 경우 전체 개발구역 1천 220만 평을 2~3개 구역으로 나누어, 먼저 출자금을 확보한 SPC부터 단계적으로 개발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지역에서는 건교부의 이 같은 방침이 구체화될 경우, 무안기업도시 개발사업이 축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건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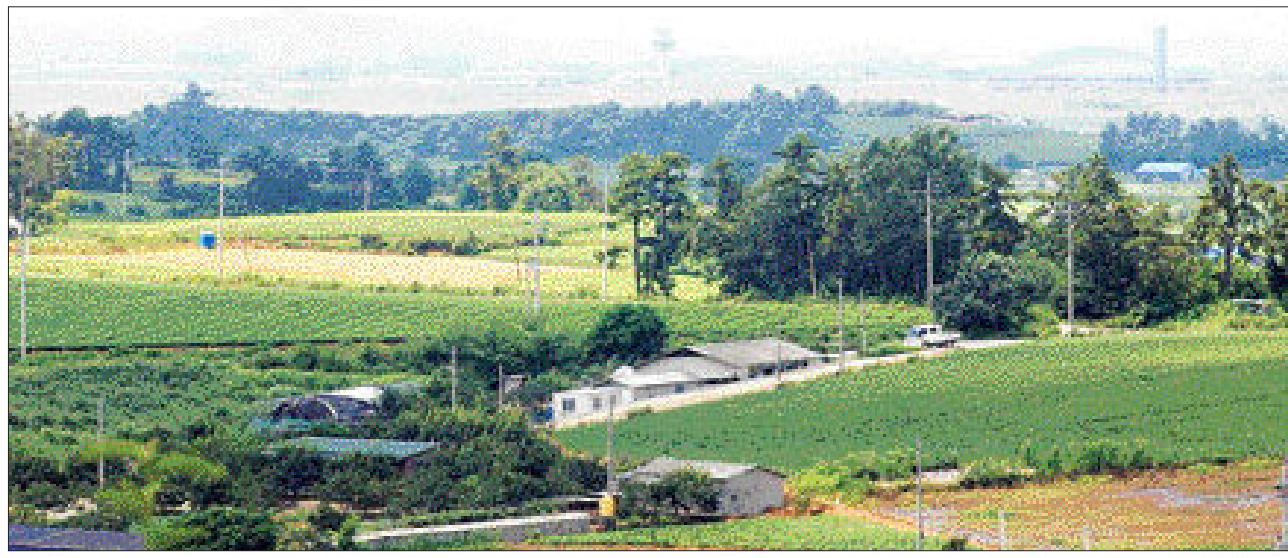
의 시나리오대로 국내 SPC인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이 먼저 사업에 착수할 경우 1천220만 평의 개발예정부지 가운데 중국 측이 요구하는 600만 평을 제외한 620만 평만 개발될 수밖에 없는 데다, 최악의 경우 중국 측 출자가 무산된다면 남은 600만 평의 개발은 물 건너갈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단계적 개발 가능성=무안기업도시가 건교부의 대안처럼 단계적으로 개발되기 위해서는 우선 무안기업도시개발(주)이 8월 말까지 국내 기업들을 상대로 1천400억 원의 출자금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개월이라는 기간 동

안 이 돈을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8월 말 개발계획승인 신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시각도 일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와 관련 무안기업도시개발(주)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초기 출자액 171억만 확보된 상태"라며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접촉중이며, 쉬운 일은 아니지만 조만간 출자금 확보가 가시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내 대기업들이 ▲무안기업도시의 성공 가능성을 확인할 수 없으며 ▲무안기업도시의 성공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해 줄 것으로 기대해 온 중국 측의 출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출자를 꺼리고 있는 만큼, 국내 대기업을 상대로 한 출자금 확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비관론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최초의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인 무안기업도시가 중국 정부의 투자 승인 거부로 좌초의 위기를 맞고 있다. 무안기업도시 예정지인 무안군 망운면 일대로 멀리 무안국제공항이 보인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 “우리가 50년 민주세력 嫡子” 민주당 ‘뿌리 투어’

7·26 보궐선거에서 조순형 후보(성북을)의 당선으로 수도권 교두보를 마련한 민주당이 역대 지도자들의 묘역을 찾아 50년 전통 정당의 뿌리를 확인하고 제도약을 다짐했다.

민주당 한화갑, 장상 공동대표, 조순형 상임고문 등 민주당 수뇌부들은 지난달 31일 신익희 선생, 조병옥 박사, 장면 박사, 박순천 여사, 정일형 박사 등 역대 지도자의 묘역을 찾아 참

배했다. 이날 참배는 7·26 재보선 이후 한층 탄력을 받고 있는 정계개편 움직임과 맞물려 민주당의 결의를 다지는 것으로 여는 때보다 주목받고 있다.

특히 민주당 지도부와 조순형 당선자 등은 1일 오전 김대중 전 대통령을 예방할 예정이다.

민주당의 이 같은 행보는 한국 정치사에서 민주당만이 민주 세력의 계보

를 이어온 정당임을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향후 정계개편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포석으로 관측된다.

여기에 민주당이 '50년 전통'을 내세우는 것은 창당한 지 3년 밖에 안된 열린우리당을 압박하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화갑 대표는 이날 참배에서 "신익희, 조병옥 박사로부터 시작해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이어지는 민주당의 역대 지도자들은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이기도 하다"며 "오늘 역대 지도자 묘소 참배는 민주당의 정통성을 확립해 정치발전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고 강조했다.

/최진민기자 man21@kwangju.co.kr

## 韓대표-朴시장 화해기류

민주당·광주시 11일 '당·정 정책협의회'

광주시와 민주당이 오는 11일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과 관련 '당·정 정책협의회'를 갖는다.

특히 이 자리에는 민주당 한화갑 대표와 박광태 광주시장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지방선거 직후 양측간에 불거졌던 불협화음 해소 여부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민주당 최인기 정책위의장은 "오는 11일 광주시와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 등 지역 현안과 내년도 국비 지원 예산 문제 등에 대해 당정 정책협의회를 가질 것"이라며 "이 자리에는 한화갑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박광태 광주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인기 의장은 "지방선거 직후 불거졌던 민주당 중앙당과 박광태 광주시장의 불협화음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미 다 해결된 사안"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주당과 광주시는 더욱 단합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장은 "오는 17일에는 전남도와 정책협의회를 갖고 P-1 특별법, 기업도시 조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민주당은 광주·전남지역 현안 해결에 단력을 모아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 문제와 열린우리당 광주지역 국회의원과 박광태 광주시시장의 송사 문제 등은 논의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중앙당 관계자는 "중앙당이 광주시의회 원 구성 과정 및 박 시장과 열린우리당 국회의원들과의 송사 문제에 관여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한화갑 대표와 박광태 시장의 불화는 과장된 측면이 있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통해 두 분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전남도-도의회 갈등 봉합

조직개편안 조율...8일 임시회 처리키로

민선 4기 조직개편안을 둘러싸고 빚어졌던 전남도와 전남도의회간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들어갔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연석회의를 갖고 8일부터 사흘간 임시회를 열어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 조율안과 관련 도와 도의회의 입장을 조율, 수정동의안을 마련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후 김영록 행정부지사와 유장중 기획관리실장, 김양수 행정혁신국장 등 두 관부들은 의회를 찾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에게 조직개편의 취지에 대해 적극 설명하고 그간의 마찰에 대해 사과함으로써 갈등 봉합의 토대를 마련했다.

도의회는 이날 연석회의에서 당초 집행부가 제출한 조직개편안에는 경제통상국의 포함시키려던 환경분야를 기존 대로 해양수산국에 남겨 두고, 정부부지사의 역할

도 기존의 7개 항목에 도지사의 재량권을 주는 항목을 추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또 농어촌마을 통합마을을 위해 신설되는 행복마을과 별정직 인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이같이 논의내용을 도와 적극 조율해 수정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집행부와 갈등으로 처리되지 못했던 조직개편 관련 조율안은 오는 8~10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도가 의회에 제출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경제과학환경국의 비대화, 정부부지사의 사무분장 포괄적 규정, 별정직 공무원의 증원, 행복마을과의 사업취지 등 4가지 문제점을 들어 처리를 유보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 남구의회 파행 우리-민주 의원 갈등

민주당 위주의 원구성에 대해 열린우리당 소속 구의원들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광주 남구의회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31일 광주 남구의회에 따르면 신인용 의원 등 열린우리당 소속 구의원 5명이 28일 의장단 불신임안과 임시의회 소집안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달 11일에도 의장단 불신

임안을 제출했으나 의회 사무국이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구의회 의원은 모두 12명으로 민주당 소속이 7명, 열린우리당 소속이 5명으로 비교적 적절한 비율로 선출된 것으로 평가돼 왔다. 하지만 의장단 선출 과정에서 다수파인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차지했으며 이에 열린우리당 소속 구의원들이 의정활동을 보이콧하자 상임위 배정까지 의장단 임의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경기자 jpkpark@kwangju.co.kr

좋은 사람, 좋은 여성 - 참좋은 여자와 함께 하면 기쁨이 두배가 됩니다.

주거임대주택 상용은이제와 함께

<p><b>대우건설</b></p> <p>1,490,000</p> <p>2,390,000</p> <p>3,290,000</p> <p>2,440,000</p> <p>3,390,000</p>	<p><b>대우건설</b></p> <p>2,090,000</p> <p>2,990,000</p> <p>1,470,000</p> <p>1,590,000</p> <p>999,000</p>	<p><b>대우건설</b></p> <p>1,199,000</p> <p>899,000</p> <p>899,000</p> <p>1,149,000</p> <p>499,000</p>
---	---	---

상세한 부동산 정보와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섹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